

통합시 명칭·교육자치 방안·농어촌 소외 최대 관심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정부 지원 바탕 대도약의 기회”
시·도지사 직접 참여 동참 호소
시도민 통합 대의명분 공감
인구·인프라 쓸림현상 우려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19일 광주시 동구와 영암군에서 시·도민 공청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관련기사 2·3면>

지난 2일 광주전남 통합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공청회에서 시·도민은 통합의 대의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자체 단체 명칭, 전남 농촌 소외, 통합청사 위치 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 통합 추진의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19일 영암군 청소년센터와 광주시 동구청 대강당에서 잇따라 개최한 공청회에는 각각 500여명과 400여명의 시도민이 행사를 기록 매워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와 뜨거운 관심과 기대감을 증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연간 5조원, 총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정부 재정 지원 등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결합을 넘어 전남과 광주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는 대도약의 기회”라면서 “정부로부터 이끌어낼 20조원 이상의 재정 인센티브가 전남의 낙후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가능케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남 주민들은 통합 이후 전남 농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가 광주로 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 동구권역 합동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준호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등이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명했다. 통합시도 명칭을 광주·전남 특별시에서 전남광주 특별시라고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주민은 “협오시설이 전남으로 밀려들어 오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항도 특별법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이어진 광주 동구 공청회 공청회에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 60년간 호남의 인구와 경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와 지역의 통합 열망이 맞물린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통합의 대원칙으로 ‘불이익 배제’와 ‘더 특별한 지원’을 전명했다. 통합이 돼도 기존 혜택은 유지되며, 특례를 통해 확보한 예산과 권한으로 AI,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동구를 헬스케어와 문화산업의 관문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민들은 “행정통합 논리에 밀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일부는 통합 청사의 위치와 명칭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통합 시장이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의 죽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양 시도 단체장은 “시도민의 의견이 최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해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을 막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 지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통합 논의에는 교육계도 힘을 보탰다. 김대

중 전남도교육감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양 공청회에 나란히 참석해 ‘교육 통합’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들은 인구 소멸의 주된 원인이 교육 문제로 인한 청년 유출임에 공감하며, 통합을 통해 교육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글로벌 교육’을 실현해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준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도 의원, 기초단체장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통합 성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영암·동구를 시작으로 전남도 내 22개 시군과 광주시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 한파’

매섭고 긴~ 추위 온다
내일부터 최고 7cm 눈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大寒)인 20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매서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강한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9일 밤 9시를 기해 광주시와 담양·곡성·장성 등 4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온은 20일을 기점으로 곤두박질쳐 당분간 평년(최저 영하 5도~0도)보다 낮은 강한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3도 분포를 보였으나, 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22일 최고조에 달해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강추위와 함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 21일 이른 새벽 전남 서해안에서 시작된 눈은 오전 중 광주시와 전남 중부 내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예상 적설량은 전남 서해안이 2~7cm, 광주시와 전남 중부 내륙 지역은 1~3cm다. 특히 전남 서해안은 2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눈 소식은 주말까지 이어져 토요일인 24일 오전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고흥·여수·목포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서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 대중교통, ‘월 4만~5만원대’ 요금으로 무제한 이용

광주시, ‘광주G-패스’에
‘모두의 카드’ 정액권 기능 탑재

올해부터 광주 시민은 월 최대 4만~5만원대 요금만 부담하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광주G-패스’(K-패스)에 국정과제인 ‘모두의 카드’ 기능이 결합되면서 교통비 지원 혜택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두의 카드 시행에 따른 광주G-패스 지원계획 조정안’을 확정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마일리지 환급 방식의 ‘광주G-패스’에 ‘비용 상한액(정액권)’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시민이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계층별 월 자부담 상한액(일반형 기준)은 일반인(40~64세) 5만5000원, 청년(19~39세)·어르신

(65세 이상)·2차녀 부모 5만원, 저소득층·3차녀 이상 부모 4만원으로 확정됐다.

예를 들어 45세 일반인이 한 달에 대중교통을 60회 이용해 총 7만5000원의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광주G-패스(환급률 20%)를 적용하면 1만5000원을 환급받아 6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자부담 상한액인 5만5000원만 내면 된다.

광주시는 ‘광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적용해 39세 까지 청년 혜택(상한액 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청년 지원 대상 기준(19~34세)보다 수혜층을 늘렸다. 기존 대중교통 ‘1일 2회 제한’ 및 ‘월 60회 한도’ 규정이 전면 폐지돼 횟수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체계도 일부 조정됐다. 정부의 K-패스 어르신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 시비 추가 지원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이 받는 총 혜택은 기존과 동일한 50%로 유지되면서 국비 활용도는 높였다.

이번 혜택은 1월 1일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별도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광주G-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 학교
www.kwangshin.ac.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